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33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광 현 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                               | 1  |
| III . 주요내용 .....                              | 2  |
| IV . 검토의견 .....                               | 4  |
| 1. 총괄 검토 .....                                | 4  |
| 가. 제정안의 구성 체계 .....                           | 4  |
| 나. 검토의견 .....                                 | 6  |
| 다. 국토교통부 의견 .....                             | 14 |
| 2. 주요 항목별 검토 .....                            | 15 |
| 가. 정의(안 제2조) .....                            | 15 |
| 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 19 |
| 다. 사업비의 지원 등 및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6조 및 제7조) .. | 22 |
| 라.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             | 28 |
| 마.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안 제12조) .....                  | 33 |
| 바.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안 제14조) .....                | 35 |
| 사. 사업구역의 지정(안 제17조) .....                     | 40 |
| 아. 적합업종의 지정(안 제20조) .....                     | 44 |
| 자.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안 제21조) .....            | 46 |

|                                         |    |
|-----------------------------------------|----|
| 차.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 51 |
| 카.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 65 |
| 타. 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43조) .....        | 74 |
| 파. 벌칙 및 과태료(안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      | 78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 II.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융합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 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공항경제권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

마. 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일괄협의와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바.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사.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5조).

## IV. 검토의견

### 1. 총괄 검토

#### 가.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으로 본칙 5개의 장 5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 분 | 조 문  | 규 정 사 항                       |
|-----|------|-------------------------------|
| 본 칙 |      | 제1장 총칙                        |
|     | 제1조  | 목적                            |
|     | 제2조  | 정의                            |
|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제5조  | 공항운영자의 책무                     |
|     | 제6조  | 사업비의 지원 등                     |
|     | 제7조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     |      | 제2장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등           |
|     | 제8조  |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     | 제9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
|     | 제10조 | 기본계획의 변경                      |
|     | 제11조 | 기초조사                          |
|     | 제12조 |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
|     | 제13조 | 공항경제권지원단의 설치 등                |
|     |      | 제3장 공항경제권사업                   |
|     |      | 제1절 공항경제권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
|     | 제14조 |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
|     | 제15조 |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
|     | 제16조 | 사업계획의 제안                      |
|     | 제17조 | 사업구역의 지정                      |
|     | 제18조 |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
|     | 제19조 | 행위 제한 등                       |
|     | 제20조 | 적합업종의 지정                      |
|     |      | 제2절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 및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 |
|     | 제21조 |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
|     | 제22조 |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
|     | 제23조 |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     | 제24조 |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
|     | 제25조 | 인가·허가 등의 의제                   |
|     | 제26조 |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     | 제27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     | 제28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 구 분 | 조 문             | 규 정 사 항                   |
|-----|-----------------|---------------------------|
|     | 제3절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 |                           |
|     | 제29조            | 공항경제권사업의 총괄관리             |
|     | 제30조            | 토지 등의 수용·사용               |
|     | 제31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     | 제32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     | 제33조            | 선수금                       |
|     | 제34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     | 제35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     | 제36조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
|     | 제37조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     | 제38조            | 비용의 부담 등                  |
|     | 제4절 준공확인 등      |                           |
|     | 제39조            | 준공확인                      |
|     | 제40조            | 공사완료의 공고                  |
|     | 제41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     | 제42조            | 조성토지의 처분                  |
|     | 제43조            | 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
|     | 제44조            | 입주자협의회 구성 등               |
|     | 제45조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     | 제4장 보칙          |                           |
|     | 제46조            | 청문                        |
|     | 제47조            | 권리·의무의 이전                 |
|     | 제48조            | 권한의 위임                    |
|     | 제5장 벌칙          |                           |
|     | 제49조            | 벌칙                        |
|     | 제50조            | 벌칙                        |
|     | 제51조            | 벌칙                        |
|     | 제52조            | 양벌규정                      |
|     | 제53조            | 과태료                       |
| 부 칙 | 시행일             |                           |

## 나. 검토의견

현재 공항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객, 물류 등 기본적 기능 외에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의 기능이 강조되는 등 공항 역할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지난 2020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sup>1)</sup>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허브 기능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물류, 업무 및 비즈니스, 관광·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공항이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의 경우 공항 주변지역이 암스테르담시의 중심업무지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헬싱키 공항은 공항 주변지역에 주거, 물류, 산업, 업무 등 지구를 복합적으로 개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15개 공항(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지역발전 측면의 기여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1) 공항을 통한 지역상생발전(2020), 국토연구원

또한,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2019.12.)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2021.9.)에서 “공항-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항이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본 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본 제정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여러 현행법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sup>2)</sup>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sup>3)</sup> 등 신공항 건설을 규정한 법률은 신공항의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법」<sup>4)</sup>은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한국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sup>5)</sup>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2024.8.14. 시행).

---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일: 2024. 8. 14.]

또한, 각 공항 주변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동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개발과 관련한 법률에 따른 개발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제정안과 유사하게 교통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한 법률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2024년 8월 현재 동 법률에 따른 개발이 미흡한 점<sup>6)</sup>을 고려할 때, 본 제정안도 이와 같은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교통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한 법률로서 앞서 언급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제정안의 조문체계와 내용은 「항만재개발법」과 상당 부분 유사함.

---

6) 기사에 따르면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1호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중임.  
“1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 등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창이다. 춘천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호 사업이다. 춘천역~근화동 하수처리장 일원 50만㎡ 부지에 총 사업비 57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한다. 춘천역을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하고 주거·상업·업무·문화·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강원도민일보, “역세권 개발 예타결과 이르면 연말 확정”, 2024.05.13

출처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609>

**< 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조문 체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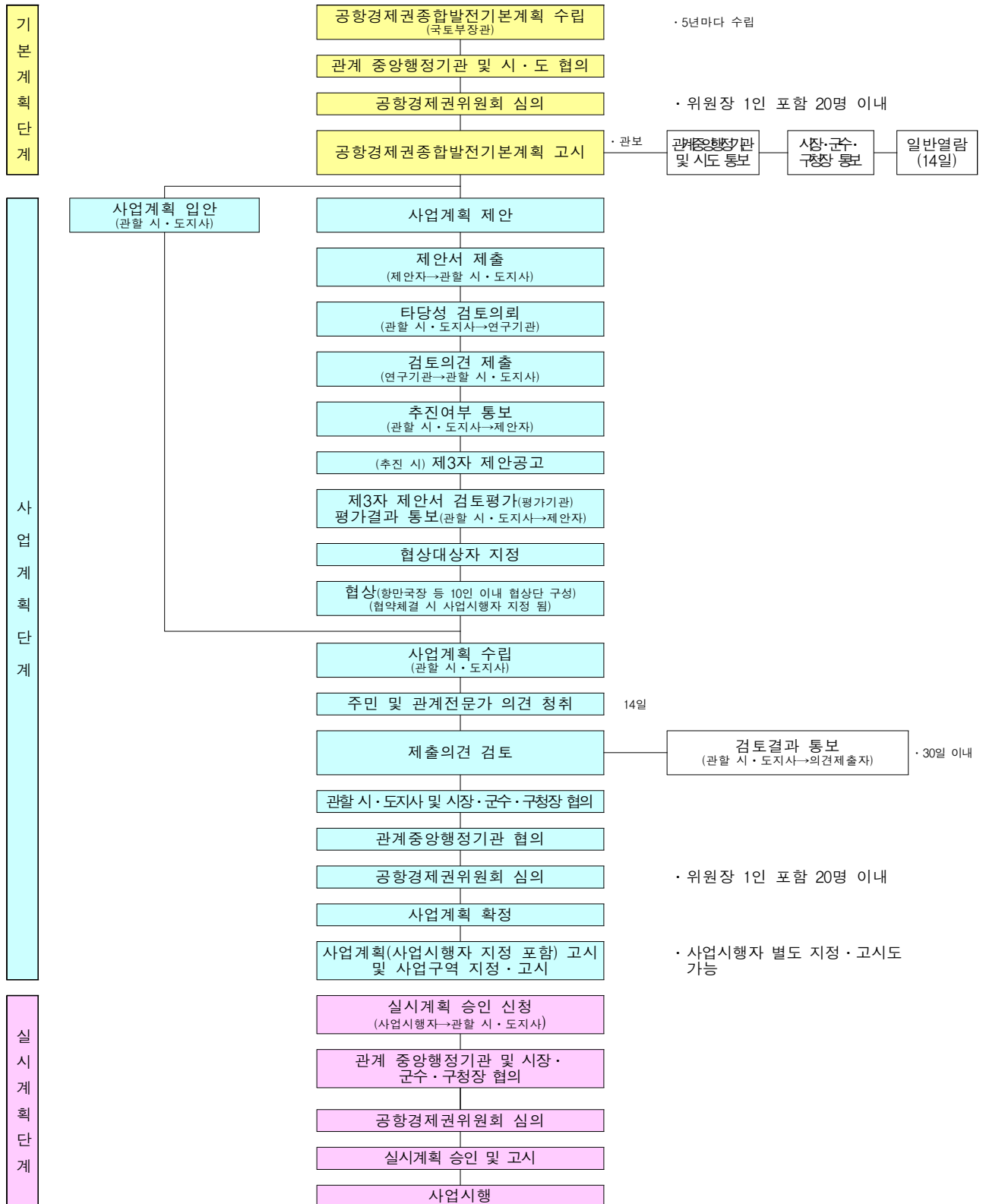
| 구 분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br>관한 특별법안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br>발전에 관한 법률       |                        | 비 고 |
|-----|----------------------------------|------------------------|----------------------------------|------------------------|-----|
| 본 칙 |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     |
|     | 제1조                              | 목적                     | 제1조                              | 목적                     |     |
|     | 제2조                              | 정의                     | 제2조                              | 정의                     |     |
|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br>책무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br>책무      |     |
|     |                                  |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5조                              | 공항운영자의 책무              |                                  |                        |     |
|     | 제6조                              | 사업비의 지원 등              |                                  |                        |     |
|     | 제7조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                        |     |
|     | 제2장<br>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등           |                        |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                        |     |
|     | 제8조                              |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br>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br>수립       |     |
|     | 제9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6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     |
|     | 제10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7조                              | 기본계획의 변경               |     |
|     | 제11조                             | 기초조사                   | 제8조                              | 기초조사                   |     |
|     | 제12조                             |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                                  |                        |     |
|     | 제13조                             | 공항경제권지원단의 설<br>치 등     |                                  |                        |     |
|     | 제3장 공항경제권사업                      |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     |
|     | 제1절 공항경제권사업계획 및<br>사업구역          |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br>및 사업구역          |                        |     |
|     | 제14조                             |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 제9조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
|     | 제15조                             |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br>관한 특례    | 제10조                             | 복합시설용지에 관<br>한 특례      |     |
|     | 제16조                             | 사업계획의 제안               | 제11조                             | 사업계획의 제안               |     |
|     | 제17조                             | 사업구역의 지정               | 제12조                             | 사업구역의 지정               |     |
|     | 제18조                             |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 제13조                             |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     |
|     | 제19조                             | 행위 제한 등                | 제14조                             | 행위 제한 등                |     |
|     | 제20조                             | 적합업종의 지정               |                                  |                        |     |
|     | 제2절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 및<br>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 |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br>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                        |     |
|     | 제21조                             |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br>의 지정 등  | 제15조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br>의 지정    |     |
|     | 제22조                             |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 제16조                             |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     |
|     | 제23조                             |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br>획의 승인 등  | 제17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br>획의 승인 등  |     |
|     | 제24조                             |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                             |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     |
|     | 제25조                             |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제19조                             | 인가·허가 등의 의제            |     |
|     | 제26조                             | 인가·허가등 의제를<br>위한 일괄협의회 | 제20조                             | 인가·허가등 의제를<br>위한 일괄협의회 |     |
|     | 제27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1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
|     | 제28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br>손실보상    | 제22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br>손실보상    |     |

| 구 분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br>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br>발전에 관한 법률       | 비고 |
|-----|-----------------------------------|----------------------------------|----|
|     | 제3절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    |
|     | 제29조 공항경제권사업의 총괄관리                | 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    |
|     | 제30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    |
|     | 제31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
|     | 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
|     | 제33조 선수금                          | 제27조 선수금                         |    |
|     | 제3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
|     | 제3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
|     | 제36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br>매각의 예약         | 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br>산 매각의 예약     |    |
|     | 제37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br>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31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br>등에 관한 특례      |    |
|     | 제38조 비용의 부담 등                     | 제32조 비용의 부담                      |    |
|     |                                   | 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br>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    |
|     |                                   | 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br>합원 생계대책협의회   |    |
|     | 제4절 준공확인 등                        | 제4절 준공확인 등                       |    |
|     | 제39조 준공확인                         | 제35조 준공확인                        |    |
|     | 제40조 공사완료의 공고                     | 제36조 공사완료의 공고                    |    |
|     | 제41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
|     | 제42조 조성토지의 처분                     | 제38조 조성토지의 처분                    |    |
|     | 제43조 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br>채투자           | 제39조 개발이익의 채투자                   |    |
|     |                                   | 제4장 보칙                           |    |
|     | 제44조 입주자협의회 구성 등                  | 제40조 입주자협의회 구성 등                 |    |
|     | 제45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제41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
|     | 제4장 보칙                            |                                  |    |
|     | 제46조 청문                           | 제42조 청문                          |    |
|     | 제47조 권리·의무의 이전                    | 제43조 권리·의무의 이전                   |    |
|     | 제48조 권한의 위임                       | 제44조 권한의 위임                      |    |
|     | 제5장 벌칙                            | 제5장 벌칙                           |    |
|     | 제49조 벌칙                           | 제45조 벌칙                          |    |
|     | 제50조 벌칙                           | 제46조 벌칙                          |    |
|     | 제51조 벌칙                           | 제47조 벌칙                          |    |
|     | 제52조 양벌규정                         | 제48조 양벌규정                        |    |
|     | 제53조 과태료                          | 제49조 과태료                         |    |
| 부 칙 | 시행일                               |                                  |    |

따라서 본 제정안이 제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공항경제권 개발절차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재개발 절차<sup>7)</sup>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7) 참고.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절차도

## 【 공항경제권 개발 절차(안) 】



다만, ①제정안은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지원·발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제정안에 따른 개발사업의 주체는 「항만재개발법」과 달리 장관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라는 점, ③개발이익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제정안은 기금을 조성하는 반면, 「항만재개발법」은 별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국토교통부 의견

과거 10년 간,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지자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항경제권 사업 추진을 검토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의 도출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임.

공항경제권의 범위가 현행 「공항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항구역 및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항공정책위원회’ 등 기존 계획 및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공항경제권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 따라 계획되는 철도, 도로 등의 시설 구축계획에 배치되며,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국·공유지 사용 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여러 현행법으로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계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2. 주요 항목별 검토

### 가. 정의(안 제2조)

| 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이란 여객·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li> <li>2. “공항경제권”이란 공항의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공항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li> <li>3. “공항경제권사업”이란 공항경제권에서 공항과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관광, 교육, 휴양, 상업 및 레저 등을 연계한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4.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li> <li>5. “사업구역”이란 공항경제권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li> <li>6. “공항산업”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li> <li>7.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제15호·제17호·제21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0호 및 제32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li> <li>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업</li> <li>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li> <li>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활용하는 사업</li> <li>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드론산업</li> <li>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 공항,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을 개발·운영·지원하는 사업</li> <li>사.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li> </ol> </li> </ol> |

| 제 정 안                                                                                                                                                                                                                                                                                          |
|------------------------------------------------------------------------------------------------------------------------------------------------------------------------------------------------------------------------------------------------------------------------------------------------|
| <p>공항·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서비스 산업</p> <p>8. “적합업종”이란 공항경제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산업분야로 제20조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9. “공항경제권시설용지”란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p> <p>10.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p> <p>1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p> |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공항경제권”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공항경제권”을 “공항의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 것은 그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주변지역”의 경우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그 범위가 예측가능성이 높음.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정의)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2. “공항경제권”이란 공항의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공항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sup>8)</sup> 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또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세권<sup>9)</sup>”을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경제권”의 범위에 「공항시설법」 상 “공항개발예정지역”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공항개발예정지역 내 공항시설”과 “공항구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적용되는 상위법 및 개발계획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공항개발예정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 8)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가. 철도운행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이전·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공항경제권”의 정의가 모호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제 정 안                                                                                                                                                                                                                                                                                                                                                                                                            |
|------------------------------------------------------------------------------------------------------------------------------------------------------------------------------------------------------------------------------------------------------------------------------------------------------------------------------------------------------------------------------------------------------------------|
|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공항산업 및 적합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 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공항운영자의 책무) ① 공항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과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p>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책무 규정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됨<sup>10)</sup>.

이에 따라 책무 규정에서는 주로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 법의 전반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책무를 규정하는바, 본 제정안의 목적인 공항경제권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10)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p.270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공항운영자의 책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에 명시된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의 주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안 제5조제2항은 공항운영자<sup>11)</sup>(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과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운영,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고, 개정 후 시행(2024.8.14. 시행) 중인 제10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그 사업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는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목적으로 공항의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수

---

11)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행을 제시하고 있고, 제9조에 따르면 그 사업범위는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한정됨.

그러므로 제정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간의 상충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 사업비의 지원 등 및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6조 및 제7조)

| 제 정 안                                                                                                                                                                                                                                                                                                                                                                                                                                                                                                                                                                                                                                                                                                                                                                                                                                                                                                               |
|---------------------------------------------------------------------------------------------------------------------------------------------------------------------------------------------------------------------------------------------------------------------------------------------------------------------------------------------------------------------------------------------------------------------------------------------------------------------------------------------------------------------------------------------------------------------------------------------------------------------------------------------------------------------------------------------------------------------------------------------------------------------------------------------------------------------------------------------------------------------------------------------------------------------|
| <p>제6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자·출연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li> <li>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li> <li>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li> <li>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li> <li>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li> </ol> |

안 제6조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출자·출연 등(제1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②국고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제2항)하거나, ③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제3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규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안 제6조제1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용자 등은 안 제38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 및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②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제2항), ③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3항)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나, 동 유사입법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서해 5도, 접경지역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관련된 특별법에 규정된 경

우가 대부분으로 공항경제권사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지원을 규정함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
| ※ 사업비 지원 관련 유사입법례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 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특히, 「항만재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입법례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공항공사는 안 제6조에 관하여 특정 공항의 공항경제권 사업비 지원 시, 공항경제권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등에 대한 형평성 저해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안 제6조제3항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7조는 공항경제권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sup>12)</sup> 등에 따라 「조세제

---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안  
제7조제1항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요구됨.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  
감면을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  
며, 조세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음, 부담금 감면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담금 부과의 목적과 취지를

-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 12. 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 5. 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 1. 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는 해  
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개별 부담금에 대한 감면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포괄적인 감면조항을 특별법으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제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라.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 제 정 안                                                                                                                                                                                                                                                                                                                                                                                                                                                                                                                                                                                                                                                                                                                                                                                                                  |
|------------------------------------------------------------------------------------------------------------------------------------------------------------------------------------------------------------------------------------------------------------------------------------------------------------------------------------------------------------------------------------------------------------------------------------------------------------------------------------------------------------------------------------------------------------------------------------------------------------------------------------------------------------------------------------------------------------------------------------------------------------------------------------------------------------------------|
| <p>제8조(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목표와 중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li> <li>3. 적합업종 선정과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적합업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항공기정비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진흥, 연구개발, 문화관광의 진흥방안을 포함한다)</li> <li>5.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li> <li>6.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li> <li>7.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li> <li>8. 연계교통시설의 신설·개선에 관한 사항</li> <li>9.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li> <li>10.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li> <li>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li> <li>12. 연차별 자원조달 대책</li> <li>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항이 위치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

안 제8조는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기본계획 - 사업 계획 - 실시계획 -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8조제2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 항산업, “항공산업”과 적합업종의 육성·진흥·지원 등(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제3조13)에 따를 때 항공정책기본 계획 수립 시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항공정책기본계획과 중복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항공사업법」의 목적14)이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항공사업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15)에 따를 때 사업구역은 “사업계획”에

---

13) 「항공사업법」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4)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제17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따라 지정된다는 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것은 사업 예정 구역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항만재개발법」 제5조제2항제3호와 유사하게 “공항경제권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를 때 기본계획에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실상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사항을 모두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체화 혹은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항만재개발법」 제5조제3항은 다른 법률 상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또한 「공항시설법」 상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기본계획 수립)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8조(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 |

②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p>하여 5년마다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목표와 중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li> <li>3. 적합업종 선정과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적합업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항공기정비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진흥, 연구개발, 문화관광의 진흥방안을 포함한다)</li> <li>5.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li> <li>6.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li> <li>7.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li> <li>8. 연계교통시설의 신설·개선에 관한 사항</li> <li>9.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li> <li>10.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li> <li>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li> <li>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li> <li>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p>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li> <li>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li> <li>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li> <li>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li> <li>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p>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항이 위치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 <p>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

## 마.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안 제12조)

| 제 정 안                                                                                                                                                                                                                                                                                                                                                                                                                                                                                                                                                                                                                                                                                                                                                                                                                                                                                                                                                                                                                                                         |
|---------------------------------------------------------------------------------------------------------------------------------------------------------------------------------------------------------------------------------------------------------------------------------------------------------------------------------------------------------------------------------------------------------------------------------------------------------------------------------------------------------------------------------------------------------------------------------------------------------------------------------------------------------------------------------------------------------------------------------------------------------------------------------------------------------------------------------------------------------------------------------------------------------------------------------------------------------------------------------------------------------------------------------------------------------------|
| <p>제12조(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①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4. 제20조에 따른 적합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5.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li> <li>6. 제43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 시·도지사</li> <li>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li> <li>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li> <li>4. 공항경제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항의 공항운영자</li> <li>5. 항공·도시계획·교통·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li> </ol> <p>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안 제12조는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항경제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사업계획 수립·변경(안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구역 지정(안 제17조제3항), 적합업종 지정(안 제20조제2항), 실시계획 승인(안 제23조제3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sup>16)</sup>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항공사업법」 제4조<sup>17)</sup>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국토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와 항공정책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항만재개발법」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을 수행하고 있음<sup>18)</sup>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항공사업법」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바.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안 제14조)

| 제 정 안                                                                                                                                                                                                                                                                                                                                                                                                                                                                                                                                                                                                                                                                                                                                                                                                                                                                                                                                                         |
|---------------------------------------------------------------------------------------------------------------------------------------------------------------------------------------------------------------------------------------------------------------------------------------------------------------------------------------------------------------------------------------------------------------------------------------------------------------------------------------------------------------------------------------------------------------------------------------------------------------------------------------------------------------------------------------------------------------------------------------------------------------------------------------------------------------------------------------------------------------------------------------------------------------------------------------------------------------|
| <p>제14조(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항별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li> <li>2. 공항경제권사업의 내용, 대상지역 및 면적</li> <li>3.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li> <li>4. 공항경제권 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li> <li>5.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방식</li> <li>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li> <li>7. 공공시설의 설치계획</li> <li>8.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li> <li>9.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li> <li>10.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사항(공항경제권시설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11.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12.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li> <li>13.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14. 재원조달계획</li> <li>15.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p> |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정 안

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⑧ 관할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안 제14조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항별로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수립·변경 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임.

사업계획은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기본계획 - 사업계획 - 실시계획 - 실시”)의 하나로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제정안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시·도지사로서 「항만재개발법」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sup>19)</sup>

1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

인 것과 차이가 있으며, 「항만재개발법」 제9조제2항은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제정안에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경제권 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안 공모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14조제8항은 관할 시·도지사도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초조사는 안 제11조에서 이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계획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도 그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사업법」 조문 비교(사업계획 수립)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14조(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항별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br>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 |

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p>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li> <li>2. 공항경제권사업의 내용, 대상지역 및 면적</li> <li>3.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li> <li>4. 공항경제권 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li> <li>5.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방식</li> <li>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li> <li>7. 공공시설의 설치계획</li> <li>8.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li> <li>9.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li> <li>10.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사항(공항경제권시설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11.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12.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li> <li>13.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14. 채용조달계획</li> <li>15.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p>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li> <li>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li> <li>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li> <li>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li> <li>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li> <li>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li> <li>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li> <li>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li> <li>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li> <li>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li> <li>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li> <li>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15. 채용조달계획</li> <li>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④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p> <p>⑧ 관할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p> |

## 사. 사업구역의 지정(안 제17조)

| 제 정 안                                                                                                                                                                                                                                                                                                                                                                                                                                                                                                                                                                                                                                                                                                                                                                                                                                |
|--------------------------------------------------------------------------------------------------------------------------------------------------------------------------------------------------------------------------------------------------------------------------------------------------------------------------------------------------------------------------------------------------------------------------------------------------------------------------------------------------------------------------------------------------------------------------------------------------------------------------------------------------------------------------------------------------------------------------------------------------------------------------------------------------------------------------------------|
| <p>제17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p> <p>②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관할 시·도지사는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목적</li> <li>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li> <li>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li> <li>4. 제30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li> <li>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li> </ol> |

안 제17조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항경제권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업구역이 지정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항만재개발법」<sup>20)</sup>과 비교할 때 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항경제권”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기 곤란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사업구역의 지정)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17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br>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br>1.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결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br>2.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할 수 있다.<br>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결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

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결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할 수 있다.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②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관할 시·도지사는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목적</li> <li>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li> <li>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li> </ol> | <p>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목적</li> <li>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li> <li>3. 제15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li> </ol>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p> <p>4. 제30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p> <p>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p> | <p>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p> <p>4. 제24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p> <p>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p> |

## 아. 적합업종의 지정(안 제20조)

| 제 정 안                                                                                                                                                                                                                               |
|-------------------------------------------------------------------------------------------------------------------------------------------------------------------------------------------------------------------------------------|
| 제20조(적합업종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에 대한 적합업종을 지정하여야 한다.<br>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br>③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된 적합업종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안 제20조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안 제4조<sup>21)</sup>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sup>22)</sup>는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선정과 입주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적합업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공항산업 및 적합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 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제8조(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합업종 선정과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합업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항공기정비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진흥, 연구개발, 문화관광의 진흥방안을 포함한다)

안 제23조<sup>23)</sup>는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에 그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본 제정안에서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단계에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3) 제23조(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계획

## 자.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안 제21조)

| 제 정 안                                                                                                                                                                                                                                                                                                                                                                                                                                                                                                                                                                                                                                                                                                                                                                                                                                                                                                                                                                                                                                                                                                                                                                                                                                                                                                 |
|-------------------------------------------------------------------------------------------------------------------------------------------------------------------------------------------------------------------------------------------------------------------------------------------------------------------------------------------------------------------------------------------------------------------------------------------------------------------------------------------------------------------------------------------------------------------------------------------------------------------------------------------------------------------------------------------------------------------------------------------------------------------------------------------------------------------------------------------------------------------------------------------------------------------------------------------------------------------------------------------------------------------------------------------------------------------------------------------------------------------------------------------------------------------------------------------------------------------------------------------------------------------------------------------------------|
| <p>제21조(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공항운영자</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li>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li> <li>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li> </ol> <p>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li> <li>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항경제권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li> <li>5. 제24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li> <li>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항경제권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li> <li>7. 사업시행자가 제34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li> </ol>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p> |

## 제 정 안

· 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1조는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항운영자, ③공공기관, ④지방공기업, ⑤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⑥ ①~⑤ 중 둘 이상이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항경제권 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규율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1조제1항제2호는 공항운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사업법<sup>24)</sup>에 따를 때 공항운영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해당하는데,

24)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운영,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고, 개정 후 시행(2024.8.14. 시행) 중인 제10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그 사업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는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목적으로 공항의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을 제시하고 있고, 제9조에 따르면 그 사업범위는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한정되는바,

공항경제권사업이 공항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항운영자를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사업시행자)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21조(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br>①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이하 |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br>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p>“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공항운영자</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li>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li> <li>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li> </ol> <p>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li> <li>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항경제권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ol> | <p>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li>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li> <li>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li> </ol>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li> <li>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ol>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4.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공항경제권사업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p> <p>5. 제24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항경제권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p> <p>7. 사업시행자가 제34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p>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p> <p>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p> <p>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

## 차.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제 정 안                                                                                                                                                                                                                                                                                                                                                                                                                                                                                                                                                                                     |
|-------------------------------------------------------------------------------------------------------------------------------------------------------------------------------------------------------------------------------------------------------------------------------------------------------------------------------------------------------------------------------------------------------------------------------------------------------------------------------------------------------------------------------------------------------------------------------------------|
| <p>제3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
| <p>제31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
| <p>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제3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
| <p>제3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p>                                                                                                                                                                                                                                                                                                                                                                                               |

## 제 정 안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운영자
  4. 지방공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 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원형지 개발 방향, 공급계획,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 제 정 안                                                                                                                        |
|------------------------------------------------------------------------------------------------------------------------------|
|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안은 ①수용·사용(안 제30조), ②환지(안 제31조)를 규정하고 있음.

|       | 수용                               | 환지                             |
|-------|----------------------------------|--------------------------------|
| 준용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 개요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br>기존 소유자에겐 보상금 지급 | 사업시행(환지) 후 새로운 지번 및 구역 배정      |
| 토지 소유 | 사업시행자가 취득<br>종전 소유주는 현금, 채권 등 취득 | 종전 소유주가<br>환지 이후 새로운 토지 취득     |
| 공공 정비 |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체 소유주로서<br>정비사업 부담    | 기반시설 등 공공 필요지 배정 이후<br>잔존부지 환지 |

안 제30조는 사업시행자가 공항경제권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등<sup>25)</sup>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이 있으면 「토지보상법」<sup>26)</sup> 상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sup>27)</sup>에도 불구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내로만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내용임.

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sup>28)</sup>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수용·사용절차를 통해 공항경제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토지수용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수용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30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인정·고시를 의제할 경우, 공익적 필요성<sup>29)</sup>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가 미흡한 상

---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8) **안 제38조(비용의 부담 등)** ①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9)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의미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음(2014. 10. 30. 2011헌바129).

“...현재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법에 열거되어 있다. 다만 법이 공용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즉, 공공성의 확보는 1차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을 행할 때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이 수용이 가능할 만큼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사업인정권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태에서 토지등의 수용·사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점과

안 제30조제3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할 경우, 예를 들어 토지수용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이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되려면 안 제19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sup>30)</sup>된 상태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바,<sup>31)</sup>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룰 경우 장기간에 걸쳐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제정안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4조의<sup>232)</sup>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를 제한하고 있어 「토지보상

30) 안 제19조(행위 제한 등)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단서 생략>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법」 별표를 개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항경제권사업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1조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환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는 내용임.

이러한 환지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토지 취득을 위한 초기사업비를 절감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32조는 사업시행자가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항경제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규정으로 보이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수 있음.

|                                                                                                                                                                                                   |
|---------------------------------------------------------------------------------------------------------------------------------------------------------------------------------------------------|
|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관련 유사입법례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33조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 및 효율적인 재원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수 있음.

|                                                                                                                                                                                                                                    |
|------------------------------------------------------------------------------------------------------------------------------------------------------------------------------------------------------------------------------------|
| ※ 선수금 관련 유사입법례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19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br>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도시개발법」                                                                                                                                                                                                          |
| 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br>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안 제34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전자,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즉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원형지 공급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원형지 공급은 자연친화적인 개발 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항경제권을 개발함에 있어 자연친화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별·지역별로 원형지 공급의 필요 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로 한다면 무분별한 원형지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항만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과 같이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원형지 공급 관련 유사입법례                                                                                                                                                                                                                                                                |  |
| 「도시개발법」                                                                                                                                                                                                                                                                          |  |
|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u>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u> 한다.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li> <li>4.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li> <li>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li> </ol>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u>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u> 한다.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 <u>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u> 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li> <li>2. 지방자치단체</li> <li>3. 항만공사</li> <li>4. 지방공기업</li> <li>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li> </ol>                                                                                                                                      |  |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3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 제2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31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p> | <p>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p>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p>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제3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p> <p>1. 국가기관</p> | <p>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p> <p>1. 국가기관</p>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2. 지방자치단체<br/>3. 공항운영자<br/>4. 지방공기업<br/>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p> <p>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원형지 개발 방향, 공급계획,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1. 제1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br/>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p> <p>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p> | <p>2. 지방자치단체<br/>3. 항만공사<br/>4. 지방공기업<br/>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p> <p>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1. 제9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원형지의 개발방향<br/>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p> <p>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p>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li> <li>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li> </ol> | <p>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li> <li>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li> </ol>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카.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제 정 안                                                                                                                                                                                                                                                                                                                                                                                                                                                                                                                                                                                                                                                                                                                                                                                                                                                                                                                                                                                                                                                                                                                                                                                                                                                                                          |
|------------------------------------------------------------------------------------------------------------------------------------------------------------------------------------------------------------------------------------------------------------------------------------------------------------------------------------------------------------------------------------------------------------------------------------------------------------------------------------------------------------------------------------------------------------------------------------------------------------------------------------------------------------------------------------------------------------------------------------------------------------------------------------------------------------------------------------------------------------------------------------------------------------------------------------------------------------------------------------------------------------------------------------------------------------------------------------------------------------------------------------------------------------------------------------------------------------------------------------------------------------------------------------------------|
| <p>제3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p> <p>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항경제권 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6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p>제37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p> |

안 제35조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을 제한하고, 사업구역 내 국공유재산으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공항경제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목적대로 처분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사업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경쟁입찰이 기본 원칙으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수의계약 허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유상 매입이 원칙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인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sup>33)</sup>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 등의 예약제도를 규정 중이나, 공항경제권사업은 예약의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특례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은 유상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매각 예약을 통해 취득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다른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국·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국유재산법」<sup>34)</sup>은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

---

33) 「국유재산법」

제45조(개척·매립·간척·조립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34) 「국유재산법」

내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은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20년을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인 토지는 5년의 대부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5)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6.>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및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sup>36)</sup>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제37조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36)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임.

이는 국·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허용함으로써 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항경제권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국·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을 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sup>37)</sup>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으로 국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해당 재산의 활용·처분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제약되어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기간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장기간(20년) 사용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하도록 하기보다는 갱신 시마다 사업의 유효성, 허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법령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공유지의 영구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시 공유지의 소유자인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반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 제37조제3항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 해당 영구시설물을 기부·반환하도록 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안 제37조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처럼 안 제37조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국공유재산 관련 조문)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3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 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br>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 |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 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br>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p>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6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br/>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p>제37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p> | <p>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 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1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br/>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p>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p> | <p>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p> |

## 타. 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43조)

| 제 정 안                                                                                                                                                                                                                                                                                             |
|---------------------------------------------------------------------------------------------------------------------------------------------------------------------------------------------------------------------------------------------------------------------------------------------------|
| <p>제43조(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공항경제권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항경제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p> <p>② 기금은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안 제43조는 공항경제권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항산업·항공산업의 육성,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항경제권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 국가의 균형 발전 및 국민경제의 향상 도모라는 제정안의 목적<sup>38)</sup>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설치 요건으로 수입-지출 연계,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 안정적 재원조달·사업추진의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sup>39)</sup>, 제정안에 따른 기금의 주요 재원은 개발이익으로

38)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업과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안정적 재원 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항만재개발법」 4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39)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4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3. 해당 사업구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 산업의 일차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 4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 안의 철도시설을 개

관한 특별법」<sup>42)</sup> 등 다수 입법례는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기금 조성을 통한 재투자의 범위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개발이익 재투자)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43조(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공항경제권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항경제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br>② 기금은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br>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br>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의 구성과 |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br>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br>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br>3. 해당 사업구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발구역 안 또는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 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터 등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p> |

## 파. 벌칙 및 과태료(안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 제 정 안                                                                                                                                                                                                                                                                                                                                                                                                                                                                                                                                                                                                                                                                                                                                                                                                                                                                                                                                                                                                                                                                                                                                                                                                                                                                                                                                        |
|----------------------------------------------------------------------------------------------------------------------------------------------------------------------------------------------------------------------------------------------------------------------------------------------------------------------------------------------------------------------------------------------------------------------------------------------------------------------------------------------------------------------------------------------------------------------------------------------------------------------------------------------------------------------------------------------------------------------------------------------------------------------------------------------------------------------------------------------------------------------------------------------------------------------------------------------------------------------------------------------------------------------------------------------------------------------------------------------------------------------------------------------------------------------------------------------------------------------------------------------------------------------------------------------------------------------------------------------|
| <p>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li> </ol> <p>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li> <li>2.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li> </ol> <p>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구역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li> <li>2.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li> <li>3.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li> </ol> <p>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li> <li>2.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li> </ol> |

| 제 정 안                                                                                                                                                                           |
|---------------------------------------------------------------------------------------------------------------------------------------------------------------------------------|
| 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br>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br>4. 제2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서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br>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49조부터 제51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벌칙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에 따른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2조는 행정 상 의무이행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각 규정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위반행위의 태양과 그에 따른 제재 정도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 < 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조문 비교(벌칙·과태료)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br>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br>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p> <p>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li> <li>2.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li> </ol> <p>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구역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li> <li>2.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li> <li>3.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li> </ol> <p>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p> <p>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li> <li>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li> </ol> <p>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li> <li>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li> <li>3.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li> </ol> <p>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br>특별법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br>법률                                                                                                                                                                                                                                                                                                                                                                                                                                    |
|---------------------------------------------------------------------------------------------------------------------------------------------------------------------------------------------------------------------------------------------------------------------------------------------------------------------------------------------------------------------------------------------------------------------------------------------------------------|---------------------------------------------------------------------------------------------------------------------------------------------------------------------------------------------------------------------------------------------------------------------------------------------------------------------------------------------------------------------------------------------------------------------------------------------------------------|
| <p>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li> <li>2.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li> <li>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li> <li>4. 제2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서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 <p>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li> <li>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li> <li>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li> <li>4.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서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

|              |
|--------------|
| 문 의 처        |
| 02)6788-55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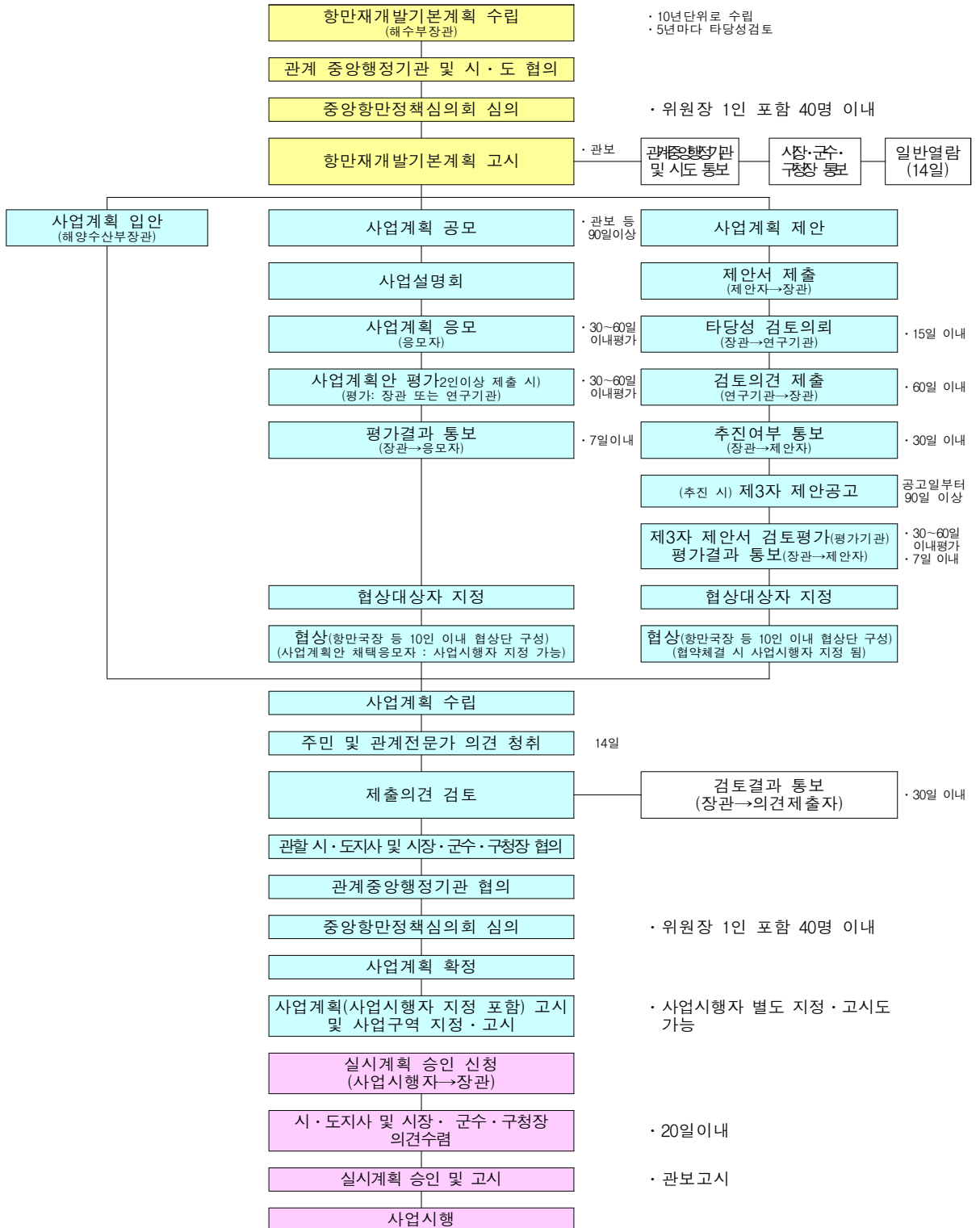
## 참고1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절차도

기본  
계획  
단계

사업  
계획  
단계

실시  
계획  
단계



자료 : 해양수산부